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한국근현대사에서 혁명과 개혁의 시련과 4월혁명의 정신

- 4월의 유산 계승과 개혁의 과제 -

한 상 범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머리글 : 오늘날의 개혁 전선을 돌아보며

나는 군사정권이 일단 종식된 이후에 김대중 정부 하에서 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창설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직을 2004년 4월 18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을 수행했다. 정부 부처의 장 직책으로서는 길게 근무한 편이 된다. 특히 독재정권의 주체나 그에 편승 기생해 이득을 챙겨온, 아직도 건재한 구기득권 부류들에게는 어떤 기구보다 불편하고 두렵고 치가 떨리도록 미운 기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였다. 그래서 그 기구를 대표하는 장으로서 미움도 많이 받아오고 있고 수구 기득권 부패부류 쪽으로부터의 비방과 모함도 끊임없이 당해 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직책을 해낸 것은 위원회를 지지 성원해 오는 국민대중의 힘에 도움을 받은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을 잠시도 잊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국민의 개혁 열망이 얼마나 강인하게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간의 개혁 일선에서의 문제에 부닥치며 알게 되고 또 고심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국민 앞에 경과를 알리는 것이 앞으로의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나 개인의 심정을 말한다면 4월혁명은 내 생애 가장 보람을 느끼게 해준 사건으로, 지금도 그 정신을 마음에 두고 평생 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1950년 이승만의 정치과동이란 개헌 쿠데타가 내 마음에 안겨준 충격과 그에 대한 회의와 분노로 몸부림치고, 이승만 비판 발언으로 경찰서 심문실에 끌려가는 체험을 처음으로 한 나에게 4월혁명은 삶에 대한 보람과 자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나에게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나는

국민 앞에 내가 겪은 그간의 행적을 일부나마 보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먼저 강조해 둘 일은 개혁은 혁명 못지않게 어렵고 복잡한 형극의 길이라는 점이다. 개혁을 표방하는 인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개혁의 수레바퀴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개혁 방향을 앞서 안내하며 개혁에 반발하는 방해꾼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는 이 일에 아직도 크게 구멍이 뚫렸다. 누수되는 게 아직도 많고 개혁을 방해하는 자가 사회요직과 공직에 잠복해 있다. 공무원교양강좌에 나온 연사가 현직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색깔 비방을 해도 명칭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유나 관용이 아니다. 국민이 뽑아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근거 없이 자기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빨갱이라고 하면 그러한 빨갱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사람은 불고지죄가 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원인은 우리의 정치적 미숙 때문이다. 역사에서 더 배워야 한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혁 과제는, 서방사회가 15세기 이래 르네상스(문예부흥)와 종교개혁, 계몽시대의 지적 사회운동과 과학기술 성과의 실용적 수용,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정치혁명)으로 이룩한 성과를 짧은 기간에 이룩해야 하는 이른바 ‘단축된 제혁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더욱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는 딘(Vera Michel Dean) 교수의 좀 오래된 책이지만 내가 1960년대 초에 보고 많이 배운 바 있는 그의 저서 《비서방세계의 성격》(The Nature of The Non-Western World, A Menter Book, 1957년 초판 1962년 개정판 참고)에 의거해 “단축된 제혁명”이란 말을 쓴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그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좌초되었다. 여기서 민족적 불행과 비극이 지속적으로 만성화되게 되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개혁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민족이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발전유형에 대해서는, 1960년대 사회학적 업적으로서 최고의 성과로 꼽히고 한국사회에서도 일찍이 소개된 바 있는 미국의 사회학자 베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까치 간행)이 지금도 상당히 도움 되는 참고서이다. 영국, 미국 및 프랑스의 선진국 발전모델과 시민혁명이 좌초되어 왜곡된 19세기 독일, 제정(帝政) 러시아 및 일본의 명치유신 모델, 그리고 중국 농민혁명의 사례 등은 나름대로 우리를 돌아보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다.

끝으로 나는 이 문제를, 19세기 시민혁명이 좌절되어 왕권과 귀족세력 등 반동이 주도권을 장악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특히 ‘청년독일학과’와 독일관념론 철학이라는 일대 정신혁명을 경험한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시련과 투쟁의 문학 생애를 통해 조명해 봤다. 박정희의 군사폭정 하에서 말과 글이 압제의 쇠사슬에 얽혀 있던

1970년대 당시에, 나는 하이네의 예술과 삶을 빌어서 무엇인가 말해 보자는 문제 의식으로 250여 매의 원고를 썼다. 이 원고는 그 당시의 유일한 비판적 잡지였던 계간지 《창작과 비평》에 게재되었다(한상범, <프로시아 국법체제와 하이네의 투쟁>, 《창작과 비평》 1977년 겨울호).

지금 그 당시의 사정과 대비해 보면 30여 년간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정치적 미숙에 머물러 있고 과거 독재 잔재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1. 제국주의의 침략과 아시아의 대응 : 한·중·일 비교를 통한 문제제기

(1) 아시아 지배계급의 쇄국정책의 좌절과 임기응변적 타협의 대응

자본주의적 팽창의 필연적 결과인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하여 모든 아시아 국가의 지배계급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쇄국정책으로 대응했다. 비단 조선 조의 대원군만의 고집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서양의 실력인 대포와 군함의 위력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에서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여야 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피지배층을 배신하면서까지라도 살아남고자 외세에 굴복 타협하고 투항하기도 했다. 인도의 제후와 제왕이 그러한 전철을 걸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도 아마도 서양과의 관계에서 네덜란드의 문물을 몇 백 년 전부터 받아들이고 1840년의 아편전쟁의 패전과 영·불 등의 국력과 정책에 대한 정보와 충고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운명이 중국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경우는, ‘소중화’를 자처한 양반 지배계급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서구에 대한 정보가 더욱 어두워서 위정척사(衛正斥邪)란 유교적 정통교학의 도그마를 고집하다가 결국 영·미 제국주의 헌병보조원이자 극동조선 개방의 선발대가 된 일본제국주의의 함포외교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2) 아편전쟁을 통한 동아시아 중화중심체제의 붕괴와 중국 혁명의 길

중국은 서방 제국주의 침략으로 반(半)식민지화되는 치욕의 패배를 불평등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강요당하기 전까지 중화제국이라는 구체제 최고의 제국의 질서체계를 헛되이 고집하다가 결국 1841년 아편전쟁으로 영국 제국주의에 굴복, 불평등조

약을 체결함으로써 서구 제국주의에 문호를 개방했다. 결국 반식민지국가로 전락해 간 것이다. 그러한 제국의 몰락이 중국의 지배층에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도록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치욕의 사실로 다가온 것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함으로써이다. 그 때부터 청나라 지배계급의 개혁은 물론 개량이고 중화 중심의 질서에 매달려 보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서방 제국주의의 군사기술과 산업문명을 일부 도입 모방한 채 구체제의 천자(天子)지배의 이데올로기와 구신분사회의 지배를 고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대응은 대개 비서방 왕조의 상투적인 대책이었으나 그것을 일부나마 관철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일본이었다. 몰락해 가는 청조 안에서 구체제에 대한 저항은 일찍이 태평천국의 봉기에서 비롯된다. 반청 항거는 이 민족인 만주족의 지배에 대한 저항하는 당시 중국사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것이 결국 손문의 삼민주의인 민족주의, 민권주의 및 민생주의로 발전해서 청조를 타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외래 제국주의 지배를 배제하고 대내적으로 봉건 구질서를 비롯한 구지배 질서를 전면적으로 타도하고 농민혁명에 성공한 것은 중국공산당 지도의 이른바 신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결국 중국이 반식지 지배를 극복하고 근대적 국가로 자립을 이루어 낸 것은 1919년 5.4운동 이래 선진 혁명세력으로 성장한 공산주의 당파가 주도한 혁명에 의해서였다.

(3) 일본 명치유신의 성취와 그 역사적 평가

아시아에서 식민지화를 면하고 근대국가체제로 발전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국가는 1867년 명치유신이란 개혁을 이룩한 일본이었다. 사실 동아시아 나라 가운데 서구 제국주의 침략 하에서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 상태를 면한 것은 일본뿐이다. 타이 등 예외적인 나라도 몇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반(半)식민지 상태로서 명목만의 구왕조 체제였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특수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일본에 서양 문물수용의 통로가 트이고 서양과의 교류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임진란 당시까지 소급해 볼 수 있다. 비록 쇄국정책으로 일관하였지만, 나가사키(長崎)를 창구로 하는 서양과의 교역거점과 ‘난학(蘭學:네덜란드학술)’이란 서양학문이 비록 제한된 분야에서나마 유지되어 와서 서양의 과학기술 수용의 기초구조가 구축되어 있고 인재육성도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조선처럼 완고한 정통교학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유교 이데올로기가 지배층의 수양이나 실천덕목 정도로 정착되어 있어서 쇄국이 중화질서와 연계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인 184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서방 제국주의가 극동의 일본에 힘을 미칠 수 없었던 시기를 일본지배층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근대화가 주로 서양의 무기 등 군사면과 과학기술 산업의 수입을 위주로 할 뿐 서양의 시민적 민주제도와 합리주의 정신을 피해가면서 오히려 구시대 이데올로기와 제도인 왕을 신의 자손으로 신격화·우상화한 신권적·외견적 입헌주의 국가로 통일국가를 완성했다. 그러면서 철두철미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 국가의 극동의 헌병보조원으로 앞잡이 역할을 떠맡으면서 서양 제국주의 대열에 끼어드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같은 동류에 속한 아시아 나라에 대한 침략을 대외적인 진출에서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일본으로서는 서방 제국주의 전쟁에 동조·기생하는 국가체제로 위치에서 해외시장과 원료공급지를 개척하고자 하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해적적 진출을 노골화한 군사국가·전쟁국가로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와 민권을 거세한 관료지배국가가 되었다. 특히 천황을 신(神)으로 신격화하는 합리주의와 과학의 정신을 거세한 비합리주의적 정신구조였기 때문에 시민사회적 발전 기반은 취약했다. 후에 침략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결국 영·미 제국주의에서 자립하여 그들을 배반해 대결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자멸의 전쟁이 되어 1945년을 끝으로 파멸했다. 그 후 다시 폐허의 원점에서 출발해야 했다.

그런데 일본의 관료지배의 군사국가적 체질과 천황(天皇) 신권주의(神權主義) 지배를 통한 통치구조는 결국 패전 이후에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그 정신구조와 신화는 끈질기게 재생·심화되어 오고 있다. 패전 이전 시대의 구지배층의 계속적인 지배와 전쟁책임에 대한 시인에 따라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패전 후 미 점령 하에서 미국주도 개혁으로 마지못해 민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민주제도는 명목상 혹은 행정상의 관료제도로서 운영되는 수준으로 전락시켜 허구화시켜 왔다. 그리하여 20세기 말경에는 다시 군국주의 복고와 우경화·반동화된 전쟁국가로의 회귀라는 현상으로 경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 침략으로 희생당했던 이웃 나라들과 아시아 민중들의 의혹과 반감을 사고 있다. 그러한 일본의 반동화의 최대 피해자는 현재도 한국과 한민족이다.

(4) 한국의 식민지화와 민족해방과 민주화투쟁의 좌초와 시련

1875년 일본제국의 침략으로 반식민지화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1905년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한국의 처지는 1945년 일제가 항복한 이후에도 일제가 자행한 종전 전후의 잘못된 처리로 말미암아 한국은 분단과 내전을 겪는 등 최대 피해국가

와 피해민족이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1919년 3.1운동으로 민주공화제 입국을 선언, 망명정부를 세우고 항일 반제투쟁을 했지만, 결국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지배를 벗어났기 때문에 분단 되고 남북이 각기 정부를 세우고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다. 즉 우리 민족의 투쟁에 의해 일제가 패망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 패전하여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나고 결국 1945년,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군정하에 예속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적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군정은 친일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친일파 지배구조는 그대로 존치되고 그것이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졌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비록 헌법 자체에 일제 잔재청산을 명시했지만(헌법 제101조), 친일파와 이승만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여기서 우리 한국의 민주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은 1960년 4.19혁명이다. 이는 민중이 권력자를 퇴진시키고 그 민중의 요구가 비록 혁명주체가 정권을 직접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국정에 반영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혁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민중의 이름으로 민족과 민주주의 대의를 추진한다면 4월의 정신을 기점으로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지각(遲刻:뒤늦은)한 시민혁명”을 지금 우리는 개혁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다. 이를 좀더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자.

2. 한국의 혁명과 개혁의 투쟁과 시련 : 그 역사적 교훈과 유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1) 민권 민주사상의 원류: 실학·동학·서양 시민사상과 운동의 3대 맥

조선조 선각자들의 새 시대를 개척하려는 노력과 투쟁은 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가인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을 대표로 꼽는 사상운동(또는 계몽운동)에서 볼 수 있다. 정다산의 <탕론(湯論)>이란 논저는 비록 짧지만 한국판 사회계약론이고 인민주권의 발상이다. 허균의 《홍길동전》은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혁명적 발상이 담긴 것으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토마스 페인의 《인권론》을 합친 한국판 유토피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구상과 나아가서 이용후생의 민중복지를 위한 실용학술기예가 후에 개화사상으로까지 발전했다. 이 점은 강재언의 《조선의 개화사상》에 그런 대로 잘 정리되어 있다(姜在彦, 姜在彦著作選 (3)朝鮮의 開化思想, 明石書店, 1996 및 (5)近代朝鮮의 思想, 1996 참조할 것).

그리고 농민해방전쟁의 투사인 성직자 토마스 뮌처를 연상하게 하는 동학의 최재우, 최해월 그리고 전봉준 등의 사상, 즉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란 인간해방 사상운동은 비록 일제 간섭으로 좌절당했지만, 1919년 3.1운동의 민권봉기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일찍이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와 개신교는 서방의 제국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서양문물을 전해주고 인간의 인격적 자각을 종교라는 의식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시민사회의 문물을 전파해서 한국의 근대적 발전운동에 밑거름이 되었다. 일제식민지배하에서는 조선의 일부 선교사나 기독교인들이 항일투쟁에 동참하였다. 그들은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옥사(獄死)를 하면서까지 기개와 절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것은 항일과 인간양심 신앙의 수호 투쟁의 숭고한 모습이다.

이러한 우리 근세 민권운동의 3대 원류의 유산을 적절히 이해 평가하고 그 교훈과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①우리 나름의 민중 자각에 의한 시대적 과업 동참에서 외세 제국주의가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자주성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아야 한다. ②전제(專制) 또는 독재와 폭정 하에서는 종교적 조직을 통하거나 종교라는 외피(外皮)를 쓰고서라도 민권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박정희의 폭정 하에서 1970년대 일부 성직자의 현실참여와 반독재투쟁에서도 본다. ③그리고 민권의 좌절에 따른 이탈자의 배신이란 시련은 항상 혁명과 개혁에는 따르게 되고 그 투쟁은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2) 지배층의 투항과 식민지화: 1876년 문호개방과 식민지화의 길

우리는 이조말엽 일제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문호를 개방, 불평등조약을 체결해 반(半)식민지화되었다. 그 후에 결국 식민지화로의 길을 걸어간 경위를 다음과 같은 연표를 통하여 회고 반성할 수 있다.

- 1875년 일제의 운양호사건 도발과 1876년 강화도조약이란 불평등조약 체결로 반(半)식민지화. 그 직후 구미 제국주의 열강과 조약 체결. 이 당시에 일본제국주의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침략 원정을 자행. 미국측은 1953년 미국 페리제독의 일본개항 등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함포외교의 기술과 국제법적 지식을 일본제국주의에게 제공함.

- 1884년 김옥균 등이 갑신쿠데타를 시도하다 실패. 일본제국주의에 의존한 정세판단의 착오. 조금하게 자체 역량과 조건을 무시하고 위로부터의 모험적 개혁시

도. 결국 실패.

- 1894년 농민항쟁이 동학조직을 통한 혁명적 쫓기로 나타남. 이어 반외세투쟁. 그러나 일·청 양국 외세를 끌어들이는 지배층의 실수와 농민군축에 대한 배반. 청일전쟁에서 일제 군대의 군사적 기선제압과 지배층 일부가 일제에 굴복 투항. 일제 주도 후견의 개혁시도로 근대적인 제반 법제수립 등 국정개혁. 그러나 일제의 개혁 의도가 한국식민지화에 있었음.

-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제의 승리 이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3개국 간섭으로 일제의 중국이권 탈취에 일부 실패하자 궁정 내에 친러시아파 등장.

- 1895년 일제는 조선조정의 친러파세력의 대표인물로 민왕후 제거를 획책. 일제 미우라공사 등 무장집단이 궁정에 난입하여 민왕후를 살해하고 친일정권 수립 (이른바 왕후 시해의 을미사변). 당시 대원군은 자기와 대립되어 있던 민왕후를 학살하는 일인 무뢰배 집단의 호위하에 수행하여 일본의 무법 불법적 살인을 묵인 동조하는 추태를 연출. 이처럼 당시의 왕족을 비롯한 지배층 일부는 엄청난 과오를 사사로운 감정과 이득에 집착하여 범함.

- 1900년 중국에서 의화단 봉기가 있자 영, 미, 불, 독, 러 등 구미연합군에 일제는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제국주의 간섭전쟁에 가담하여 서구 제국주의 이익에 봉사 동조.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극동 헌병보조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인정을 받음. 그것이 후에 영국과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를 대변하여 러시아와 대결하는 러일전쟁으로까지 됨.

- 1904년 영일동맹과 미국 지원 묵인 하에 러시아에 대해 기습적인 도발로 시작하여 마침내 1905년 승리. 미국의 주선으로 강화조약체결 후에 일·미 양국은 카츠라(일본 대신)·태프트(미 국무장관)간의 밀약으로 조선의 식민지화에 대한 미국의 승인 양해와 미국의 필리핀 영유에 대한 일본의 승인 보장의 거래를 함. 그로 인해 1905년 한국이 을사조약 강요로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을 당시에 한국 주재 미국외교사절이 제일 먼저 철수하여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를 인정.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국익이란 기준에 의한 세력정치의 실재를 우리는 파악해야 함. 그런데도 그 이후의 국제관계 인식에서 일부 나라에 대해 감상적 동조와 과잉 신뢰로 편향해 자주성을 몰각해 오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냄.

- 1910년 한국을 일본제국의 이익수호의 '생명선'으로 책정한 일본각의의 침략정책의 각본에 따라 식민지 강점강행. 한국지배구조는 보호국하의 일본 통감지배에서 일본 왕을 대행 대리하는 조선총독의 지배로 이전.

(3) 3.1운동과 민주공화제 입국의 선언: 항일 반(反)제국주의 투쟁으로의 길

일제하 조선총독에 의한 조선지배의 법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관제”란 일제의 칙령(勅令;일본 왕의 권한으로 발한 법령)에 의해 설치된 조선의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이고 그 기구의 총수인 조선총독은 일왕을 대리하여 입법권(制令 制定권)을 비롯해 행정 및 사법권을 통할하는 절대권자가 되었다.

조선의 법제는 일제의 기본 법제를 차용하는 의용(依用)법령의 체제를 채택함. 그에 따라 일본의 민사법과 형사법 등 주요법률을 적용 시행했고 그에 대한 보완 보충으로 총독이 칙령(制令)을 제정했다.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으로 우선 조선에는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의용 시행되었다. 여기서 근대적 법제수용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은 군사 경찰의 강압통치체제와 자본주의적 사 소유권제도의 전반적 수용이었다. 후자의 경우 부동산등기제도시행을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유권자를 법적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농민은 등기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운 데다가, 일제헌병이 토지측량작업을 호위하고 있어서 겁에 질려 기피했다. 일제 헌병은 조선의 의병이나 농민군 탄압에 있어서 무차별하고 무자비한 학살 만행을 자행해 왔으므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농민대중의 근대적 법지식에 대한 무지로 신고절차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되어 그 결과가 드러났을 때 조선의 농민은 알거지가 되어 있었다.

토지조사사업 이듬해인 1919년 3.1운동에 농민대중이 독립을 부르짖어 결사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은 일제치하에선 생존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 대한 반발이고 항거였다. 대다수 농민이 조상 대대로 경작하고 있던 농지마저 박탈한 제국주의의 실체를 몸으로 겪게 된 것이다. 이른바 일제하에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으로 토지수탈에서 조선민중은 철저히 피해자가 되었다. 조선민중에게는 근대법이 일제를 통해 수용되는 과정에서부터 권리와 자율을 제한 침해당하는 객체(客體)이고 대상(對象)이 되었다.

당시 토지조사사업 결과 조선의 농민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강제언의 서술을 인용해서 살펴본다.

토지조사사업결과 농민의 소작 영세농으로 몰락된 처지

1918년 토지조사가 종결 처리되었을 때 전체 농가의 3.3%가 전체 경지면적 50.4%를 소유하는 지주가 되었다(친일지주가 주류). 한편 전체농가의 37.6%가 땅을 빼앗긴 소작인으

로 전락하고 39.3%가 자작 겸 소작농으로 되어 영세농으로 전락했다. 자작농은 전체 농가의 19.6%에 지나지 못했다고 한다(姜在彦, 日本에 의한 朝鮮支配 40年, 朝日新聞社[朝日文庫], 1992년, 64쪽에서 인용참조).

그리고 조선 사람에게 의한 자본축적과정을 막고 한편에선 일본자본의 진출을 방조하기 위해 상당기간 주식회사의 허가제도란 까다로운 사전억제 제도를 설정했었다. 그 밖에 형사법제는 근대적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인도적(人道的) 형사절차 보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고문 가혹행위를 함부로 하였고 체벌로서 태형(笞刑)을 시행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예심제도의 시행은 사실상 재판 이전에 무제한 구금과 고문에 의한 심문지속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일제식민지하에서 조선의 대중은 무권리상태에서 압제와 차별 및 착취와 수탈을 당하는 피해대중이 되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이 끝나고 조선농민이 소작인 빈곤층으로 몰락한 것이 확실하게 된 1919년에 일어난 3.1 봉기에서 농민은 일제반대에 앞장을 섰다. 여기서 내외정세의 전개를 잠시 돌아보자.

먼저 우리는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독립 희망을 걸기도 했지만, 윌슨의 민족자결은 아시아 식민지 인민의 민족자결은 아니었다. 패전국 독일치하의 민족에 대한 문제였다. 이 점은 베르사이유 강화조약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는 당시에 국제정세 판단에서 중대한 착오와 안이한 의존적 기대에 집착했다. 그러한 정세판단 하에 독립투쟁에 임함으로써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다. 그 점은 지금도 교훈으로 삼아서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3.1운동의 최대의 성과는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밝혀 독립투쟁의 전기를 뚜렷이 마련한 것이었다. 특히 우리는 구왕조의 복고가 아니라 민주공화제 입국을 지향했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통해 이조의 '대한제국'을 복고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공화국이란 민중의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이 점이 아주 혁명적이다. 다음에는 망명정권으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의 마음의 고향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임시정부의 실체가 현실적으로 미약하였다고 해서 낮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프랑스 망명정부인 드골의 런던임시정부가 어느 싸구려 호텔의 방구석 하나를 간신히 차지한 초라한 설비와 몇 사람 안 되는 인원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이 임시정부가 1941년 일제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여서 교전당사국으로서 체모를 갖추었다. 특히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우리 정부 수립의 법적 연원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주로 임정 헌법의 민주공화제 정신과

건국강령의 국가건설 방략을 이어가는 데서 그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4) 일제의 15년 전쟁개시와 항일투쟁하의 친일파의 반역과 민족에 대한 배신

3.1운동은 일제를 크게 당황케 하는 사건이었다. 여기서 일제는 군사력에 의한 계엄통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회유정책을 병행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 자체도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그러한 일제의 유화적 회유 매수정책에 편승하고 마침내는 친일 매국으로 투항하는 일부 무리가 줄을 잇게 된 점이다. 일제는 1928년 만주 군벌 장작림을 폭살한 것을 시발로 1931년 본격적인 만주침략과 괴뢰국 만주국 수립(1932년)을 비롯해 1937년 중일전쟁 및 1941년 영·미에 대한 전쟁으로 치달리게 되었다.

일제의 국내사정을 볼 때에도 1930년대는 우경화와 1936년 군부쿠데타 시도와 군의 독주가 개시되어 천황신권주의(天皇神權主義)의 고조와 국수주의(國粹主義)화, 군국주의화와 파시즘화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그래서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고 자유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요소를 모두 뿌리 뽑겠다고 해서 치안유지법을 개악 강화하면서 대내적 탄압의 파쇼체제를 강화해서 총력전의 국방국가의 전시체제를 완비했다.

이러한 탄압의 와중에서 조선의 소위 지식인과 사회유지란 부류들은 일제에 투항해 전쟁협력에 앞장서는 추태를 잇달아 연출하였다. 당시 친일파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미군정과 이승만 시대의 주역이고 명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이 등박문의 양녀인 배정자와 어울려 조선여성을 정신대(挺身隊)로 내몰고 학병으로 몰던 이들이 사회 교육 정계의 명사 원로로 행세해 온 것을 보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가 막히다. 더욱이 그들 추종자는 아직도 그들이 훌륭한다고 궤변을 떨고 있다.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하면 두고두고 그러한 매국노와 추종배의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처지를 보면 일제 패망 이후에도 미군정과 이승만 시대를 거쳐 박정희 군사정권과 신군부 지배시대까지 친일파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일제는 물러갔으나 일제의 앞잡이이자 하수인이 지배하는 일제 법령과 제도 관행과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현실을 통찰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한국사회의 실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된다.

3. 분단시대의 폭정과 4.19혁명 정신의 현주소를 찾기 위해

(1) 일제패망과 친일파

일제 패망이 거의 확실시되던 시기에 친일파의 동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소견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일제 지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무지한 친일파다. 서정주는 일제하에서 ‘가미가제’(神風) 특공대로 죽은 조선청년을 찬양하는 소설을 쓴 문인이다. 그에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친일에 발 벗고 나서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는 말하길, ‘일제 지배가 수십년 아니 수백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였다. 그렇게 무식한 못난이 친일파는 대개 말단 면서기 정도에서 많았다. 다른 부류의 눈치 빠른 친일파는 일본이 조만간 망할 것을 예상하고 자기의 친일행적의 증거를 은폐 인멸하려고 한 자들도 상당히 있다. 브루스 커밍스는 일찍이 일제 고위관리나 일부 한국인 친일파가 일제 패망을 앞두고 오래 전에 이미 온갖 대비책을 강구했다고 말하고 있다(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 창비 번역판).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한 이후 미국 점령군이 9월 이후에나 일본과 조선에 주둔하게 된 사실이다. 이 짧지 않은 공백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일제당국과 친일파는 모든 중요기밀문서를 소각 폐기하고 재산을 이양 은닉하였다.

한국에 있는 일제관리와 일본인들은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은 금은보석, 보물, 골동품, 서화 등을 하나도 일본으로 갖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들은 그것을 친일파에게 증여하거나 보관시키거나 하였다. 당시 조선의 재물을 거의 장악한 것이 일본인이었으므로 친일파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로 돈방석에 앉게 되고 그러한 재물이 친일파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그 돈이 정치자금으로 활용되어 힘을 쓰게 된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일제패망 이후 미군정이 친일파를 비호한 것만이 그들이 힘을 쓰게 된 이유는 아니다. 그들에겐 재물이 있었다. 그 재물로 무슨 일이고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했다. 이 점을 모르고선 해방 당시의 정국 상황에서 친일파의 위세와 위력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독립지사나 민족주의자가 암살 제 거당하는 곳에선 항시 친일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이유를 옳게 이해할 수 없다. 친일파가 1945년 미군정 당시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대를 이어서 실세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면의 구조적 모순을 모르고서는 한국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이다.

(2) 미군정과 이승만 집권의 배경

일제와의 전쟁이 한창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941년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했다. 동시에 미국정부의 대외첩보국(OSS)과도 임정과 광복군이 협력했다. 그렇지만 미국정부는 영국정부와 함께 임시정부를 절대로 승인하지 않았다. 프랑스 망명정부인 드골정부만이 연합국으로서 임시정부를 승인했다. 해방 당시에도 소련 못지않게 미국은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임시정부는 해방 후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법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해체되고, 이승만의 집권을 수식하거나 대한민국 법통을 주장하는 데만 잠깐 그 이름이 이용되었을 따름이다.

미군정이 친일파를 그대로 기용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우익세력으로 육성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뿐이 아니다. 미국정부는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 공작을 일찍이 착수했다. 일본의 국제 저널리스트인 오모리 미노루가 일본대사를 역임한 존 어리슨을 인터뷰한 기사에 의하면, 그는 1948년 1월 미국무부 관리로서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 공작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되었다. 그해 5.10총선거를 앞둔 시기이다. 오모리가 어리슨을 인터뷰한 기사 일부를 인용해 본다.

존 어리슨 : 내가 조선에 간 것은 1948년 1월경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관심사는 이승만을 총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죠. ...이승만 집단은 워싱턴에 까지 와서 열심히 로비활동을 하고 여러 모로 우리에게까지도 압력을 가했으니깐요...(大森實, 戰後秘史(9) 講和의 代償, 講談社, 1976년, 249쪽에서 인용)

여기서 남과 북 어디에서도 외국의 군정당국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 국익에 따른 정책을 추진했다. 이 당시 상황은 복잡 미묘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논급이 조심스럽지만 친일파와 관계된 몇 가지 점을 지적한다.

미군정 이래 많은 애국자와 민족주의자는 암살 제거 매장되어 왔다. 그런데 그 음산한 살인음모의 그늘에는 대개 친일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김구 선생을 암살한 주요가담자가 친일파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무성 근무자로서 미국정책을 비판한 윌리엄 블룸의 저서, 《깡패국가-세계 유일의 초대형 권력국가 안내》 부록에 실린 미국 정부의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암살음모를 보면, CIA(미국중앙정보국)의 암살음모대상인물 제1호가 한국의 김구 선생이었다. 여기서 인용에 그치고 더 이상의 논평은 독자의 몫으로 돌린다(William Blum, Rogue

State-A Guide to the world's only Superpower, Common Courage Press, 2000; 조용진 역, 녹두, 2003년, 396쪽).

어쨌든 1948년 제헌국회는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정법통 계승과 제101조의 친일파 민족반역분자 처벌의 근거규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1949년 이 법령에 따라 활동하던 반민특위는 이승만의 비호와 지원을 받은 친일경찰 등 친일파의 테러로 제압당했다. 결국 친일파에 대한 정치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에 결국 친일파지배구조가 더욱 공고화되었다.

(3) 이승만 정권하의 매카시즘에 의한 지배와 4월혁명의 발발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으로 정치적 위기를 면하고 더욱 심한 폭정으로 치달렸다. 그 정치테러는 매카시즘에 의한 지배였다. 외국에서도 이승만 지배체제를 ‘경찰국가’라고 하였다. 경찰국가로서 테러리즘을 앞세운 반공 매카시즘에 의해 통치했다. 이승만의 그러한 지배는 12년간 존속했다. 정권 초기부터 일제 치안유지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한 국가보안법체제의 매카시즘 지배구조였다. 이승만 정부 하에서 그의 정적(政敵)은 대개 암살당하지 않으면 매카시즘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합법적으로 제거되었다. 그리고 대개는 고문으로 학살하거나 폐인으로 무기력화시켰다. 그리고 생물학적 생명을 존치시켜도 ‘빨갱이’란 낙인을 찍어 사회적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활동거점을 말살하여서 생매장했다. 장면(주미대사)이나 신익희(국회의장)도 이승만 편에서 이탈하면 빨갱이 물이에 걸려서 맥을 못 추게 만들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장관을 역임한 조봉암은 이승만에 대항해 대통령선거에 나서자 결국은 간첩으로 몰아서 재심기회도 안 주고 전격적으로 목매 죽였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이라 해서 과거 전력에 빨갱이란 의심을 샀던 사람은 모조리 집단학살했다. 그 수자가 20만에서 30만 또는 36만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만이 넘는 데도 그러한 학살에 대해 이제까지 아무도 사과 사죄한 적도 없고, 그 학살행위로 인해 처벌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빨갱이로 몰리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김영삼 정부의 어느 내무장관은 그 현직에 있으면서 “빨갱이는 고문해도 좋다”고 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매카시즘의 위세와 위력이 살인면허를 버젓이 지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이승만은 권좌에 오르기 전부터 국부(國父) 또는 ‘나라님’이라 부르도록 했다. 아니 불리도록 강요했다. 우리 헌법은 전제군주 지배의 국가형태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한 나라님이 멋대로 칼을 휘둘러 대는 난장판 속에서 서민대중의 피해가 어떠 했는지 상상해 보라. 지금의 보통 상식으로 그 당시 상황을 참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한 전제폭군 이승만의 정권을 전복한 것이 4.19혁명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거 사인가? 여기서 이 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리해 보자.

첫째 4.19혁명은 친일파의 두목이었던 이승만의 폭정을 거부한 민족혁명이다.

이승만은 자신을 항일운동의 지사로 부각시켜 나라님으로까지 이미지 메이킹을 했으며 심지어 양녕대군 몇 대 손이라는 봉건적 이데올로기 정서까지 이용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친일파 부류에 사회 정치 경제기반을 두고 미국배경 하에 집권한 노쇠한 야심가일 뿐이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는 못 되었다.

그가 친일파의 두목이 되었던 것은 그의 주변 관료나 그의 자금 지원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가장 애호한 사람은 일제관동군 헌병보조원 출신 김창룡(특무대장)과 일제 고문경찰관의 대표격인 노덕술(군경간부)이다. 그들을 끄찍하게 좋아한 것을 들지 않더라도 그의 주변 각료에는 일제 서장출신 이익홍(내무부장관)과 일제 판검사출신 장경근(자유당 책사 내무차관) 그리고 일제군수 출신 이제학(국회부의장) 등을 들면 알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한국 고위관료들의 친일 경력표를 보면 이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라).

4.19혁명 전야에 고려대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했을 때, 친일파로서 반공청년단장이던 장택상이 학생들 앞에 나서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야유 욕설을 당해 쫓겨 갔다. 4.19혁명 당일에 시위군중들은 어용정론지로 미움을 받아오던 서울신문사와 테러단체인 반공청년단 본부를 불태워 버렸다. 당시 반공청년단 건물 앞에는 맥아더 동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야단이었다. 물론 이승만 동상은 끌어내려 거리로 끌고 다녔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의 국회의원을 하고 학원재벌로 문제가 된 박철웅은 맥아더 동상이 모멸당할 때 그 동상에 꽃다발을 걸어 주었다는 어느 청년을 내세우는 것을 봤다. 아마도 박철웅 부류의 추종자로서 그가 어떠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4.19당시의 각종 시위, 예컨대 교수단 시위나 군중시위에선 “민주반역자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나무젓다. 아마도 이 반역자의 대표는 이승만이고 친일파가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친일파의 잔당을 긁어모아서 세력을 잡은 이승만의 정체는 그 친일파들에게 일상 피해를 당해 온 민중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이 민족을 배신한 친일정권으로서 군림해 온 것을 거부하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하에서 친일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항일운동가 집안은 3대가 쫓딱 망하는 신세가 되

는 것을 보고 겪어 온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사이비 반공 매카시즘의 독재에 저항한 민주혁명으로서의 4.19정신을 들 수 있다.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떠들었으나 그는 전체군주의 정신구조를 가진 한 늙은 야심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추종자인 친일파는 민주주의란 것은 꿈에도 무엇인가 진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과시스트에 불과했다. 반공이라고 하여 자유민주를 주장하는 자를 말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하여 그야말로 자유민주제의 본질적 내용인 인간존엄과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인격과 생명의 존중을 짓밟았다. 그들의 반공은 반공이란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은 할수록 그 반발로 자유와 민주를 탄압당한 사람을 좌편으로, 용공으로 몰아가는 기묘한 반공 아닌 반공놀이였다. 무엇보다 반공이란 명목으로 누구든 법의 보호권 밖으로 방치해 고문 학살해도 좋다는 무법의 지배를 정당화했다. 그로 말미암은 피해대중이 몇 백만에 이르는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4월혁명 이후에 이승만의 매카시즘적 테러리즘으로 학살당한 유족이 들고 나온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볼 수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을 누가 왜 기획했는지는 지금에는 비밀이 아니다(제주도 출신 교육자로서 자기 부친이 학살당한 이도영이 미국 기밀문서 공개를 통해 알아낸 사실에 의하면, 6.25전쟁 이전 모 정보기관의 아무개가 기획 주역이란 것이 월간 《말》 지 등에 게재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매카시즘의 거점인 국가보안법 체제는 제도적인 잔재와 함께 인적 요소인 고문과 학살의 주범과 최고책임자와 공범과 방조자, 암살의 교사자와 가담자, 영터리 재판 주역과 그 방조자 등이 규명 청산되지 못했다. 그러한 제도적 요인의 존속과 인적 청산의 미결이 민주화의 길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아직도 누가 모르는가?

4월의 정신은 뒷전으로 돌려진 채 있다. 매카시즘의 칼바람의 위협은 위세가 있다. 매카시스트는 민주화를 주장하고 인간회복을 주장하는 사람을 용공 좌경 친북 빨갱이로 몰고 있다. 지금도 누구든 수구우익으로부터 ‘빨갱이’란 낙인이 찍히면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2004년 이른바 비전향장기수의 의문사문제를 두고 일어난 7월의 소동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은 직접 몸으로 겪었다. 수구우익 부류의 논리에 의하면 빨갱이는 고문해서 죽여도 괜찮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생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발상 자체가 빨갱이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매카시즘이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박정희식의 ‘한국적 민주주의’인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

라고는 할 수 없다. 4월의 정신이 매카시즘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은 그 진상을 규명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러한 잘못된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4월의 정신은 아직도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있다.

셋째, 4월의 정신은 민주화와 민족의 대의를 통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승만 정권도 통일을 말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북진통일’이었다. 1953년에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종전이 되었을 때 남북 어느 편도 무력에 의한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하여서 그를 사형장으로 내몰았다. 이승만 정부하에서는 1950년 6.25 전쟁 이전에도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하는 무력통일을 당장 할 듯한 기만과 허장성세를 부렸다. 그러나 결국 전쟁이 발발하자 무참히 패망 도주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은 통일을 사실상 안 하겠다고 한 민족반역적 부패기득권 집단이었다. 4.19혁명의 의미는 반통일세력을 부인 거부하는 것이다. 4.19혁명 이후에는 통일단체가 무수하게 생겨나서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4월의 정신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의 의지를 반영했던 것이다.

넷째, 4.19혁명은 친일반역과 독재에 기생하여 부정축재하고 반민족적 행실로 부패 타락하여 정의를 반역한 반윤리적 부류와 그 세력에 반대하여 정의의 구현을 추구한 것이다. 친일파는 해방 이전 시기부터 친일행각의 민족반역으로 축재했다. 그들은 자본주의는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윤리성을 포기한 인생철학을 공공연히 내세워 자기 축재의 반윤리성을 변호해 오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범죄와 죄악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실제로 돈 버는 일은 정상적인 시민생활에서의 노동과 경영에서는 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정부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부패구조 속에 기생해 치부하거나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탈법 무법으로 일확천금을 번다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면 큰돈을 버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4.19혁명 성과의 하나로서 길이 남을 입법은 지금도 참고가 되는 부정축재환수법이다. 이 법률을 보면 지금의 경제적 부정 불법 비리 범죄수법의 유형을 거의 망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경유착의 각종 유형을 비롯해서 부정축재 수법으로 은행의 특혜용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빠진 것이 있다면 부동산과 증권투기 조작을 비롯한 분식회계

로 불리는 회계장부 변조 등이다.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서 나온 말로 경제부정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모리배’와 ‘빚’ ‘사바사바’와 ‘국물’ 등을 들 수 있다. 모리배는 큰 험잡꾼이고 빚은 연줄 또는 배경을 말하고 사바사바는 뒤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국물은 뇌물 같은 불로소득을 의미했다.

대개의 보통사람은 부정과 불의가 판치는 이승만식 자유당 지배사회를 증오하고 혐오했다. 그래서 밑으로부터 들고 일어났을 때 불의에 분개하는 정의감이 있었다. 나는 종로에서 교수단 시위를 할 때 거리에 서서 구경하던 지계꾼 날품팔이 노동자가 자기의 오직 하나뿐인 생계수단인 지계를 벗어던지고 시위대열에 뛰어들면서 “뭇들 하쇼, 박수치고 따라라!” 하던 감격적인 장면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누구로부터 군중선동을 교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닐 것이다. 모습 이 초췌하고 영양불량의 얼굴을 하고 입은 것은 조선의 바지 저고리였다. 시골서 올라온 이농민으로서 하루별이로 살아가는 극빈층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당돌한 행동에 당황한 것은 대열을 짜고 시위행진을 하던 교수 한 분이였다. 그가 무엇이라고 외쳐댄 것은 사실인데, 아마도 그를 대오에 끼지 말라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그가 대오로 뛰어들면서 거리의 군중이 시위대열로 무너지듯 합류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군중의 박수에 호응하면서 의사당을 향해 갔다. 이 날은 교수단 시위가 있던 날로 1960년 4월 24, 5일경이다. 시청에 가까워졌을 때에는 대열도 없고 군중의 물결이 의사당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지계꾼과 그에게 호응한 군중의 움직임에서 그야말로 민중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또한 잊을 수 없는 광경은 고아원의 고아들이 보모들의 보호와 안내를 받으면서 “이승만 물러가라!” 며 시위하는 장면 앞에서는 왈각 눈물이 쏟아져 앞이 안 보였다. 이 가엾은 고아들은 누구의 죄로 비극의 그늘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 독재자와 그에 빌붙어서 기생하며 부귀영화를 누려온 반역자들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들을 떠올릴 적마다, 아마도 분노라고 하면 그런 심정이리라!

(4) 4월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5.16 쿠데타의 반동성·반혁명성

1961년 박정희 일당이 자행한 쿠데타는 헌법질서를 전복한 군사반란이고 내란으로서 아무리 그 동기와 목적 또는 결과가 어떻다고 변명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이 쿠데타는 박정희 등 일부 군인이 3천 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군 통수지휘권

이 미국군대에 있는 현실 속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수수께끼 아닌 수수께끼이다. 그에 대해서 미국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초대 책임자를 지낸 알렌 덜레스가 영국 BBC방송 프로에서 자기 생애의 일화를 말하는 가운데 가장 성공한 공작이란 말을 했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의 간행물에선 쉽게 읽어볼 수 있다(大江志乃夫, 戒嚴令, 岩波書店, 1978년 초판, 1992년, 23쪽).

위 오오에의 책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창조한 박정희군사정권-쿠데타 당시에 미국 중앙정보국장 알렌 덜레스는 퇴임 후 영국 BBC 텔레비전에서 말하기를 ‘내가 재임 중에 CIA 해외활동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이 혁명(한국의 5.16쿠데타)’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미국첩보기관의 작품이든 아니든 내란범죄인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친일파가 주동이 된 쿠데타이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친일 반민족 성향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실이 보도되자 일본의 만주 거점으로 활약하던 수구 극우부류는 무릎을 치며 “오카모도(박정희의 일본 이름)가 서울을 점령했다!”고 소리치며 기뻐했다는 말이 있다. 그 후 박정희는 만주괴뢰국 고관을 지낸 기시 노부시게(岸信介) 수상, 관동군 참모 세지마 류조(瀨島龍三) 중좌와 유착되어 일을 벌여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 참고로 만주괴뢰국 고관을 역임하고 전시내각의 장관이던 기시와 만주관관 시대의 박정희와의 관계에 얽힌 사연 하나를 살펴보자. 박정희가 1961년 11월 경 미국을 방문하던 중 일본에 잠깐 들렀을 때 기시 노부시게를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박이 기시에게 부탁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부분을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치로의 책에서 인용해 본다(田原總一郎, 《日本の 戰後(上): 日本은 잘못했는가?》, 講談社, 2003년, 301~302쪽에서 인용).

1961년 11월 박정희가 미국 방문길에 일본에 들렀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이 가장 신뢰하고 있던 이는 전 수상 기시 노부시게(岸信介)였다.

(박이 기시와 만난 자리에서 : 인용자)

박정희는 말하길 “한국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선생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두세 분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 후) 기시는 말하길 “한국에선 당시 정권에서 물러나면 망명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망명 후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것에 대해 상담을 받아서 (내가 추천한) 야지(矢次)

군의 도움을 받도록 했지”라고 했다.

한편 세지마 류조는 박정희의 만주시절 관동군 참모 중좌(중령)로서 만군의 하급 장교이던 박정희의 상관이자 박이 숭배해 마지않던 사람이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박정희를 비롯해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3대의 대통령을 지도했고 한국 재계의 총수가 그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瀨島龍三回想錄, 幾山河, 産經新聞社, 1995년, 420쪽 이하에서 인용 참조).

쿠데타 후 박정희는 세지마로부터 종합상사안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의 지도를 받았다.

박정희가 죽은 후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박처럼 그를 모셔서 지도를 받았다.

1980년 이 아무개 재벌총수는 세지마에게,

“한번 은밀하게 방한하셔서 군대 선배로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그의 회상록 438쪽 이하에는 전과 노가 대통령으로서 세지마의 가르침을 받는 사연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노태우는 그 앞에서 일본 여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노래를 잘 불러서 칭찬을 받았다.

세지마의 한국 인식은 어디까지나 군국주의적이었다. 그는 일본의 조선지배로 조선에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일본수상이 사과해야 하지만, 1910년 한일합병을 ‘침략’ 또는 ‘식민지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적당하다는 것이 변함없는 소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瀨島龍三, 回想錄, 442쪽 참조).

한국의 군부 안에서 친일파 계보는 박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로까지 이어졌다. 전두환은 12.12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안가(安家)에서 일본대사를 미리 만나 그에게 사전 통고를 하였다. 반면 미국에는 거사 이튿날 해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은 박선원이 영국 대학에 제출한 학위논문에서 이미 폭로되었다. 그 문헌자료는 한국에도 소개된 바 있다(박선원,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國際政治論叢》 제42집 3호 2002년, 韓國國際政治學會, 249쪽 이하 참조).

특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잘못된 것은 쿠데타로 태어났다는 태생적 한계 이외에도 친일정권이며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정통성을 결여한 불법 무법의 정권으로서 모두 국회를 강제해산시키고 군사력으로 정권을 탈취, 유지한 것이다.

다음에 박 정권을 비롯한 군사정권의 반동성은 이승만 정권의 매카시즘적 탄압수법과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것을 보다 악질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적용한 점이다. 그리하여 나라 자체를 병영화시키고 감옥화시켰다. 그 지배방식은 계엄 등 군사력의 행사와 정보공작 등 모략 밀고 감시 체제였다.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부터 조용수 민족일보사장 등 무수한 인사를 사법살인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집권기간 중에 동백림사건, 인혁당사건 등 엉터리재판에 의한 사법살인을 수없이 저질렀다.

세번째로 박정희의 친일 반민족 군사정권이나 후속 신군부정권은 민족통일을 저해하는 반(反)통일정권이였다. 1972년 유신 쿠데타 이후 평화통일을 표방하지만, 그것은 구호일 뿐 영구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의 의도와 정치적 목적은 집권연장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논의나 남북문제를 자기의 독점적 관리사항으로 하여 죽을 때까지도 통일을 국민적 참여와 대화의 장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그와 크게 다를 수 없었다. 노태우는 대통령이란 직함을 띠고 유엔총회에서 한국에는 양심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짓말을 하여 세상을 웃기고 남북교류에 관한 북한측과의 문서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인데 국회에 회부하여 동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무시했다. 근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정직한 시도가 결여되어 있었다.

네번째로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정권하에서 사회정의는 깡그리 실종되었다. 전두환 시대에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공공연히 일본말로 ‘모두 도둑놈들이야(민나 도로보데스네)’ 하는 말이 방영되어 그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회는 타락하고 국민은 자학적이고 자조적이 되었다. 1980년대의 부동산 투기와 증권조작, 정경유착이 또한 얼마나 도둑부자를 만들어 냈는가?

지금 우리가 4.19혁명의 정신을 다시금 외치게 되는 이유는 아직도 일제와 이승만 이후 이어져 오는 구시대의 잘못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4. 과거청산과 개혁의 과제 : 4월의 정신은 일어나라!

구시대의 잘못된 잔재를 역사의 격변기에는 혁명을 통해서 탈피한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했다. 4월혁명은 반혁명인 5.16쿠데타로 무산되었다. 그래서 4월의 정신이 고개를 쳐들기까지는 박정희와 그 후속 신군부의 시대가 끝장이 나길 기다려야 했다. 아니 끝장을 내는 투쟁이 필요했다. 4월의 사자는 늙고 병들고 지쳤다고 한다. 그러나 아니다. 그들의 기백과 4월의 정신은 영원하다.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과제가 되어 한다.

그 후 우리에게 1980년 광주의 용사들이 있었고, 1987년 시민의 함성으로 직선제 개헌을 밀어붙인 시민항쟁의 투사들이 있어 4월의 정신을 이어왔다. 국민의 소리와 열의는 마침내 신군부 수괴를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서 세웠다. 그리고 정권의 교체를 달성했다.

김대중 정부의 탄생은 새로운 전기를 이룩하는 개혁의 시발이 되었다. 그런데 김대중이 정권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수구반동의 수괴격인 5.16쿠데타의 책사 김종필과 연합해서 신군부를 분열 격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결국 반쪽개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개혁으로 가는 궤도를 일단 설정했다고 하는 점이다. 이제 이 궤도를 보완해서 역사청산을 비롯한 개혁으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 수구 부패기득권 부류가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반발 반격을 가하고 나선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반백 년 이상, 아니 일제 압제 때부터 얼마나 무자비한 피눈물을 쏟게 하며 고문 학살 처형 차별 모멸 날조 협박 박탈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온 무리인가? 역사를 안다면 똑바로 보라.

이것은 결코 개인에 대한 증오나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여 과거를 청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4.19혁명과 같은 좋은 기회에도 참으로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 관용스러웠다. 그런데 그것이 개혁 반대의 무리에게 역이용되고, 그들은 대중을 바보라고 경멸하면서 우민정책의 수법과 매카시즘의 방식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역사의 쓰레기 속의 곰팡이를 아름다운 장미꽃이라 속이고 있다. 더 이상 속을 수도 없고 속고 있을 겨를이 없다.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4월의 정신이 가르치는 개혁의 길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청산과 개혁의 과제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자.

- 과거청산의 대상과 과제

1. 먼저 현안으로 되어 있는 각종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입법의 제정과 개정 및 그와 관련해 구법령의 개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전체의 틀 속에서 해내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2. 과거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는 제도와 그에 따른 잘못된 판결 관행 관례 및 이데올로기의 청산작업은 전반적 검토를 통해서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독재시

대의 판례와 영터리재판을 기정사실화한 법질서 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독재 하에 뿌리박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및 봉건적 잔재 의식과 그 유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결코 민주화가 안 된다.

3. 친일 매국행위의 대가로 축재한 재산과 독재 부패의 부정축재를 이른바 사유 재산이라고 하여 보호하는 것은 범죄의 장물을 묵인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법적 정의(正義)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친일파의 재산환수를 비롯해 범법자의 장물은 국내외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를 막론하고 모두 환수하여야 한다. 거액의 장물을 외국에 빼돌리고 있는 민족반역자와 민주배신자의 재산도피를 묵인하는 자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4.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조약을 의결하고 새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고문 집단학살 각종 살상행위 등 반인륜범죄 등 잔혹행위의 방치는 실질적 정의를 유린 훼손하고 우리의 법적 정의감을 해치는 것이다.

한편 민주화 투쟁의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제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 고문 학살 각종 살상행위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배상과 보상의 거부는 그 희생자와 그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시민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여건에서 통용되는 소멸시효제도를 폭정과 압제의 위협 속에서 지나온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률생활의 기본 법리인 법적 정의 하의 안정성을 포기하라고 하는 잘못된 법적용이다.

5. 민주제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민주화 사업체제와 통일운동을 위한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토록 민관이 합심 노력하여야 한다.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규탄 캠페인은 민관을 불문하고 일상적 항구적 국민참여운동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구 부패기득권 부류의 매카시즘 수법의 반발 반격과 터무니없는 모략중상 및 수구 부패언론의 불법 부당한 반민족적 반민주적 탈선과 왜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에 대한 적법한 대응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4월의 정신이여, 21세기 우리의 민주통일의 횃불이 되어라!!!

(* 양해 말씀 : 필자의 글은 4월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빨리 알 수 있도록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생략하고 괄호주로 처리했습니다. 쉽게 당장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는 뜻입니다)